01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에핑타운센터 도심활성화지구 계획안 발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계획 · 환경부는 에핑역으로부터 반경 800m에 해당하는 에핑타운센터 도심활성화지구의 계획안을 공개하였다. 에핑타운센터는 에핑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인구증가를 대비한 '시드니 대도시 전략(안)'에서 주거지 확보를 위한 개발적지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 지역은 주거 개발에 대한 강한 수요와 주변 편익시설 개발에 대한 기대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의 발전가능성도 높았다. 이에 주 정부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혼스비, 파라마타 자치구 위원회와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과 함께 논의하여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1년부터 수행한 이번 개발계획은 온 · 오프라인상의 지역사회 컨설팅을 통해 교통, 건축물 높이 및 밀도, 공공공간, 건축자산, 교육 및 건강관련 기반시설 등 해당 지역의 주요 이슈를 도출할 수 있었다. 계획안의 내용은 지역사회 컨설팅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의 약 22%에 해당하는 지역(약 54헥타르)을 재조정함으로써 3,750가구의 거주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대중교통 및 일자리와의 접근성을 우선으로 하여 시드니 시내의 거주압박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에핑역 400m 반경 안에 있는 건축물은 8층부터 22층 높이까지 주상복합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혼스비 관할의 주거지역은 혼스비 지역환경계획(LEP: Local Environment Plan)에 의거하여 5층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전쟁 중 또는 전쟁 이후의 주거형태 전형을 간직하고 있는 건축자산보존지구는 현재보다 확대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주 정부는 혼스비와 파라마타 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두 위원회 역시 개발조정계획을 마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계획안 작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planning.nsw.gov.au/epping

에핑타운 로슨스트리트(Rawson St.), 옥스퍼드 스트리트(Oxford St.) 개선(안)

02

샌프란시스코, 보행안전을 위한 포크 스트리트 가로 디자인(안) 공개

샌프란시스코의 도시개발부와 도시개발공사, 교통국이 협력하여 작성한 포크 스트리트 개선안이 대중에 공개되었다. 포크 스트리트는 바트지역과 연결되는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 대중교통 뮤니 버스 19노선이 지나가는 가로로,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곳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보행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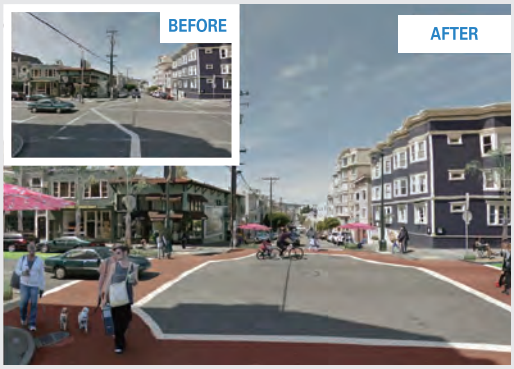
이에 도시 대중교통 정책 제1원칙에 따라 보행자와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가로환경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사업예산은 방치된 낙후도로와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가로환경을 재정비하는 데 사용하도록 조성된 도로개선 및 가로안전 채권(Road Repaving & Street Safety Bond)으로부터 공급받았다.

디자인의 중심 목표는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성 향상, 가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디자인이 적용된 구체적인 대상지는 맥앨리스터 스트리트부터 유니온 스트리트까지 이어지는 교차로 및 가로공간이다.

디자인(안)을 살펴보면 교차로와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 교통신호 마련, 연속된 조명과 녹지 확보, 도로포장 개선 등 보행 안전성 향상과 보행 어메니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나타난다.

도시개발부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각도의 의견을 수용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디자인(안)을 공개하는 것 역시 공공의 의견을 들어 추후 세부 설계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http://www.sf-planning.org/index.aspx?recordid=242&page=3418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차로 디자인 개선 방안

가로 폭 확장 및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방안

03

지자체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영국의 전원도시 지원 계획 발표

전원도시 개발을 모색하고 있는 영국의 지방정부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의 지역사회 · 지방자치부는 지난 4월 지자체 주도의 전원도시 개발과 관련한 투자설명서를 발간하면서 지원 의사와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밝혔다.

새로운 지역사회를 육성하는 양질의 주거지는 건강한 경제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주거지 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 주택공급을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점차 확장되는 도시화에 따른 국가적 주택문제의 대안으로 자자체 주도의 전원도시 개발계획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이전의 에코타운 계획과 달리 지자체 주도의 전원도시 계획은 철저히 아래로부터의 계획, 즉 지자체의 의지와 지역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난개발을 억제하고 개발 적지를 통합적 시각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정원, 녹지, 공공 오픈스페이스와 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광역교통체계 구축, 브라운필드 개발 등 보다 장기적이고 광역권의 지역 요구 설계 또한 요청한다. 투자규모는 6년간 대략 10억 파운드(약 1조 7,000억 원), 목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주택을 25만 호까지 확충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 사항은 우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개발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개하며, 주택 · 지역사회국의 대규모 개발계획 자문팀을 통해 계획과 설계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의 기존예산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한도를 제시하며, 각종 기금으로의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중개한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존중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새로운 버전의 전원도시 1호인 앱스플리트(Ebbsfleet) 개발을 위해 지방의원, 의회, 주민과 협의하여 전담 도시개발공사를 조직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다. 앱스플리트는 런던 도심으로부터 19분가량 떨어진 외곽지로 오랜 시간 개발의 요충지로 주목받았으나 10년간 투자 및 개발진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개발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 투자를 조정하고 강력한 작동기구를 조직할 방침이다.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offers-support-for-locally-led-garden-cities

04

미주리주 도시위원회, '건축물 안전의 달' 선언

미국 미주리주 도시위원회는 5월 정례회의를 통해 2014년 5월을 '건축물 안전의 달(Building Safety Month)'로 선포하였다. 개발지원부의 허가・검사팀은 위원회로부터 선언문을 전달받았다. 2014년도 '건축물 안전의 달'의 큰 주제는 회복탄력성의 최대화, 위험의 최소화(Maximizing Resilience, Minimizing Risks)였다. 이 주제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건축물 안전과 건설의 지속가능성, 화재예방 및 재해완화, 에너지 효율성과 신기술 개발 등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주지사는 건축물 안전의 달을 계기로 우리가 살고, 배우고, 일하고, 노는 모든 공간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5월 한 달 동안 주의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자연재해라는 특수한 상황 전반에 이르는 안전과 에너지 효율성, 회복 탄력성의 주요 문제를 널리 알렸다.

아울러 건축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뿐 아니라 건축가, 엔지니어, 건설업자, 기타 건설 관련 이해관계자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노력을 기울였다. 시민들은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현대 건축물 코드(modern building codes)를 따를 것을 권고받았으며, 공무원들은 이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안전 관련 자료집을 제공하였다.

건축물 안전의 달(Building Safety Month)

국제코드위원회(International Code Council)가 추진하는 건축물 안전인식 캠페인. 개인, 가정 및 기업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물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아울러 현대 건축물 코드의 활용 및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전문 인력 확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http://www.iccsafe.org/BSM/Pages/default.aspx)

http://www.yourhoustonnews.com/fort_bend/news/city-council-declares-may-building-safety-month-in-missouri-city/article_8afa7d4e-b5e4-5410-a6a9-a6bae02e0244.html

01

건축물 안전을 위한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대책 활성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테크노밸리 내 기울어진 오피스텔 철거조치 등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건축사고가 잇따르면서 설계・시공 과정에서의 부실건축 문제, 노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문제 등이 쟁점화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제도를 마련・시행함으로써 건축물 안전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전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한다.

부실건축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 실시

국토교통부는 부실건축에 대한 예방 조치로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모니터링의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하고 무작위로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에서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올해는 주로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하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시험성능을 거쳐 품질을 확인한다.

부실이 적발된 경우는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 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 조치한다.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건축 관계자의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따라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계기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할 뿐 아니라 건축 소비자의 피해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2014.05.13.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기준 및 유지·관리 개선대책 마련, 안전점검 지원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폭설 등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강화 전문가 TF'를 통해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습설하중을 반영하고 건축물 지붕 경사도를 고려하고자 건축기준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심의기준 및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

였다. 건축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또한 강화된다. 감리자는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라 건축 자재의 제작 및 반입 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건축주와 관계 전문 기술자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도 건축주의 지붕 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 다중이용 건축물 외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확대 등을 추진 중이며, 일부 지자체는 건설업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 PEB 건축물 전수현황조사 및 샘플점검을 마치고 안전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샘플점검 결과, 일부 건축물에서 접합부의 상태 및 횡하중을 견디기 위한 보강재 설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조치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2014.04.03.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4.05.22.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지자체별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착수

2012년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건축법」이 개정되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건축물은 기능 및 안전 유지, 수명연장 등을 위해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부칙에 제시된 점검기한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의 건축물은 올해 7월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건축물은 내년 1월까지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기한 내에 점검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제도의 실시방법 및 절차 이행을 위한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시·군 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점검항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6개 대항목을 중심으로 36개의 소항목, 50개의 세부항목이 있다. 점검자는 관리주체와의 면담, 건축물 유지·관리 여부의 점검, 개선방안 제시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담당하는데, 건축사사무소·감리전문회사·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된 건축전문가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건축행정 전산 시스템인 '세움터'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한다.

점검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각 지차체는 점검대상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고 기한 내에 실시해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의 정착 및 체계 확립을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02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본격 시행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사유재산인 까닭에 지자체 차원에서 공사 재개나 철거를 강제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해 2년 이상의 장기간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4월에는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장기간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 지원 및 체계적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령에 따라 정부는 공사 중단 건축물의 중단 원인, 안전상태 등 현황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는 공사 중단 정비계획 수립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건축물별 정비여부·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 실효적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법에서 정한 주요 정비방법은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다. 시·도지사는 건축물별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실시, 공사 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014.04.29.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3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개정 내용을 조례제정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공포 즉시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돼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도 지정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계획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놀이터·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익을 위해 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 이주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 및 기준도 완화되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춰졌다. 또한 건축법상 대지면적 가운데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으로,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참여하도록 정했고, 조합이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2014.04.29.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

지자체 건축 인·허가 불만 해소를 위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건축물의 인 · 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민원에 대한 심층검토, 해당 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의 방안 제시 등 지자체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현장 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로,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고자 「건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률이 개정되어 정착되기 이전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시범 운영한다.

지난 3월 열린 첫 회의에서는 출판·인쇄소의 근린생활시설 판단 여부, 공원을 낀 건축물의 허가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 외에 자동식 사진처리시설과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적용받게 된다. 공원을 낀 건축물은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됐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가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 사이의 중심선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4.04.10.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한옥을 비롯한 우리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6월 3일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밖에 문화재 등록 · 지정을 위한 요건에는 못 미치나 사회적 · 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근 · 현대 이후의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의 우수 건축자산을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 보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심의를 통해 등록 결정된 우수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증 · 개축 등 인 · 허가 시 건폐율, 높이, 건축선, 조경, 공개공지 등 관련 규제를 완화 적용하여, 불가피하게 철거 등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게 된다. 또한 여타 건축물과 동일하게 일률 적용해 온 건축법 일부 조항에 대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체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서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규칙을 마련하여 내년 6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2014.06.02.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6

경기도 ·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추진 현황

우리나라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은 2005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범죄예방디자인기법(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 서구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시작되기는 했지만, 도입된 이후 실제 해당 지역의 범죄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어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이론 및 인증제도가 구축되었고 후속 사업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추진계획과 결과 및 후속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경기도,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는 4월부터 디자인을 통해 취약지역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도시환경 설계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셉테드 시범사업을 공모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추진 대상지로 안양시와 고양시 뉴타운사업 해제구역 등 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셉테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안양시와 고양시는 4월부터 전문가 자문과 지역주민 설명회를 실시하며, 7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도는 각 지자체가 설계부터 준공까지 도에서 지정한 디자인 자문관의 조언을 받도록 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현재 안양시는 6개 학교 학생들이 등 · 하교하는 안양3동 양화로 일원의 주요 취약지역에 벽화 가림막으로 방치된 빈집 입구를 막고,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며, 시야 확보를 위한 담장 철거 및 투명 담장 설치, CCTV 및 범죄예방 블루조명, 화단 등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고양시는 고양경찰서, (사)한국셉테드학회와 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14.04.01. 경기도 디자인담당관

서울시 '싱글여성 · 시장 ·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서울시는 2013년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 개선이 완료된 지역 세 곳을 지난 4월 발표하였다. 서울에서 여성비율이 두 번째로 높고, 특히 20~30대 싱글 여성 1인 가구가 절반에 육박하는 관악구 행운동은 LED 방범등, 후면 240도까지 보이는 반사경, 비상부저와 경광등을 가로 곳곳에 설치했다.

재래시장 밀집지역인 중랑구 면목동 일대는 15개의 주민 미담사례를 벤치나 캐노피, 핸드레일로 접할 수 있는 '미담길'을 구성하였다. 가로에서 만나는 미담사례에 시선이 사로잡히면 그만큼 범죄 심리가 위축된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모여 사는 용산2가동에는 지역문제 및 갈등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양

심거울' 등을 개발하여 설치하였고, 폐・공가지역의 환경개선에 주력하였다.

이번 사업은 시의 기획 및 진행과 더불어, 주민 참여와 기업의 사회공헌이 큰 역할을 하였다. ADT 캡스, KT 링커스, 포스코 강판, 삼화페인트, 코리아 세븐 등의 기업이 환경개선을 위해 후원하였다.

서울시는 사후조치 위주였던 기존의 범죄대책에서 벗어나 디자인을 통해 환경적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는 예방책으로 전환함으로써 환경적 취약성에 의한 각종 범죄의 발생률을 낮추고자 한다. 아울러 이로 인해 연간 20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의 평가 및 보완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적용 사례집을 발간해 범죄예방 디자인 사례들의 공통 원칙과 해결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2014.04.02.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07

부산시 '빈집정비 민·관 협력사업'

부산시는 2008년부터 '폐가 없는 부산 만들기'를 시정의 주요 과제로 정해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3년에는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빈집 정리 및 정비 지원계획을 세워 빈집정비 사업의 윤곽을 드러냈으며, 그 결과 지난해까지 시비 173억 원을 들여 2,000여 동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공동화의 가속화, 사회적 여건 변화 등으로 빈집 정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이며, 기존 공공주도의 예산 지원을 통한 철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빈집 정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빈집정비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은 선정된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부산시와 구・군, 재개발조합, 시공사 등이 참여하여 '민・관 협력사업 추진팀'을 구성해 재개발구역 내 빈집실태 조사를 벌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개발조합은 빈집 정비에 따른 소유자를 설득・독려하고, 시공사는 철거하는 데 필요한 재능과 재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지난 1월 팀을 구성하고 실태조사 및 사업설명회를 마쳤으며, 38개 재개발 구역 내 465동을 민・관 협력방식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연말에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는 표창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이후 우수사례 발굴과 문제점 분석을 거쳐 이와 같은 방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4.04.10.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

08

덕수궁길 점심시간 보행전용거리 시범운영

서울시는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덕수궁길이 시작되는 대한문부터 정동교회 앞 원형분수대까지 310m 구간을 점심시간에 한해 보행전용거리로 시범 운영하였다. 운영시간은 시민 보행이 많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대 2시간이다.

시는 2012년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점심시간대 덕수궁길의 보행 인구가 시간당 5,530명으로 다른 시간에 비해 집중되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변에 관공서, 주요 기업 등 건물이 밀집해 직장인들이 산책길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도 폭이 좁은 구간, 특히 대한문 옆 진입부의 보도 폭은 0.8m에 불과해 사람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차도를 지나는 사람과 차량이 뒤엉키곤 한다.

이에 시에서는 이 구간을 보행전용거리로 시범 운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현재는 임시로 운영하지만 향후 보행량, 주변 교통상황,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시 보행전용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구간은 구 러시아공사관, 중명전, 배재학당, 정동교회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역사자원 또한 풍부한 곳이다. 따라서 시는 이 구간을 향후 문화적 요소들과 연계하여 서울의 대표 도보관광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5.15.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09

서울시 · 수원시 ·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활성화

지난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이후, 정부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3월 중앙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기획, 공사비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각 지자체 내에서도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에너지 자립비용 10억 지원

서울시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건물 부분의 에너지 소비가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시설부터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수요 감축과 에너지 생산을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 자치구 보건소와 체육센터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6곳을 선정하여 총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건축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고 에너지 시설개선과 생산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구로구 · 노원구 보건지소,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구청 별관 등을 포함한 6개의 공공시설은 친환경 자재, 자연 채광, 옥상녹화 등 친환경적 건축기법을 도입하고, 연료전지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린 리

모델링을 시행하게 된다.

시는 이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2년간 에너지 절감량과 생산량을 모니터링하여 공공시설 에너지 사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러한 시도가 건물에너지 관리의 모범사례가 되어 민간 부분 건물까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4.04.29.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에 수원지역건축사회 자문 서비스 제공

수원시는 지난해 「녹색건축물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 최대 50%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 사업을 실시하며, 특히 대한건축사협회 수원지역건축사회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협약 내용에 따라 수원건축사회 소속 16명의 건축사는 지원 대상인 42가구와 1대1 매칭 방식을 통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문 서비스는 건물 공사 등에 대한 기술 조언을 비롯해 설계, 시공, 감리, 내역서 검토 등 공사 전 과정을 살펴보고 잘못된 사항은 개선하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지난 4월 협약식에서는 수원시 관계공무원과 수원지역건축사회 건축사 등이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각자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문적인 도움말을 받아 친환경적 건축물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4.04.01. 수원시 건축과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용인시 건축조례 개정

용인시는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의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지난 5월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최우수 및 우수등급을 받은 건축물과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신재생 에너지 이용 건축물 등급인증을 받은 건축물는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의 최대 15%까지 가산해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다. 더불어 조경면적은 법적 조경면적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완화받아 축소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개정 조례에 따라 허가 전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2014.05.02. 용인시 건축행정과